

日本の 對北韓政策

1993. 8.

全 東 震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및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일환으로 대북한 접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7·18 총선 결과에 따른 일본 국내정치적 대변혁과 신보수화 경향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한 접근 및 대한반도정책 변화는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대북한접근을 통해 대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시기에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에서는 냉전이후시대 일본의 대북한정책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1992년에 발간된 「日本の對韓半島政策」의 연장으로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전반을 염두에 두면서도 대북한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일·북한수교가 남북한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및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8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및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일환으로 대북한 접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한 접근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의 기초와 목표를 분석·검토하고 일본의 대북한정책 방향을 전망하려고 한다. 특히 일·북한 수교가 통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II 章 냉전이후시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1. 동북아정세 변화와 일본의 역할증대

가. 동북아정세 변화와 일본의 인식

최근 국제질서는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구소연방의 해체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국력약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오던 양극체제가 붕괴되었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세력강화 및 역할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나. 일본의 대아시아 정치·안보 역할증대

(1) 미·일관계 조정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가장 강력히 촉구하는 요인은 미·일관계 변화이다. 미국은 1992년 1월 9일 「도쿄선언」에서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표명한 바와 같이 일본과 리더십을 나누어 가지면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을 일본과 분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 미군의 아시아 주둔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미국을 대신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등 일본에 대하여 군사적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미야자와 독트린」

1993년 1월 16일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아세안순방중 태국에서 「아·태 및 일·아세안의 새로운 시대」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탈냉전시대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역할증대를 공식 선언한 「미야자와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미야자와 독트린」을 계기로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정치 안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일본의 군사력증강 및 전략조정

일본은 「제2차 신증기방위력정비계획(1991~1995)」(총22조 7천5백억 엔)을 수립하여 전진방어를 위한 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상활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공식적으로 확대하여 일본의 방위개념을 전수방위로부터 지역방위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4) 대의원조의 전략적 이용

일본은 냉전종결과 미국과의 세계적 동반자관계에 따른 미·일 역할분담 및 일본의 정치·안보적 영향력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외국원조계획의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 증가한 75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5) 유엔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및 국제적 발언권 강화노력

일본은 유엔을 통하여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는 바,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과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1992. 10. 14~1993. 3. 26).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한 정치 군사적 실적을 쌓아 나가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G7을 자국의 국제적 발언권 증대를 위한 국제무대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6) 다자간 지역안보 주장

일본은 아·태지역의 다자간협의체 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접근방식(Two track approach)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소지역적 접근으로 한반도, 캄보디아 그리고 남지나해와 같은 지역분쟁은 소지역별로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당사국간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지역적 접근으로 ASEAN-PMC를 활용하고, 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지역내 안보문제 토의를 위한 무대로 삼으며, 이러한 기존의 다자간 협의기구를 통해 안보문제 협의 실적을 축적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장차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형의 전지역적인 안보회의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향후 아·태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ASEAN-PMC와 APEC 등 기존의 대화틀을 이용한 안보협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일본은 이러한 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지역내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역할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일본 국내정치의 신보수화

최근 실시된 일본의 총선거결과 1955년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 및 전통적인 보혁대립의 정치구도가 종식되었으며, 개혁지향의 신생보수정당들의 급격한 부상과 사회당의 참패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계재편에 따라 일본에서는 장기적으로 2개의 보수정당이 탄생하여 보다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지속과 변화

일본은 대한반도정책은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둘째, 자국에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며, 셋째,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가. 지속측면: 한·미와의 유대관계 지속

전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동북아의 국제질서, 미국의 동북아정책 그리고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 편향된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미·일 및 한·일관계를 고려한 한국 편향의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변화측면: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북한 접근노력

일본은 대한반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대북한접근을 시도하였다.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와 미국내 급박한 경제문제 해결 필요성으로 인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안보문제에서 발언권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재차 대북한 접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전망

일본은 냉전이후시대 미·일 역할분담 및 경제적 영향력을 증시하는 국제질서 변화속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북한 접근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미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로 상당기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한국에 갖고 있는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편향의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Ⅲ章 일본의 대북한정책

1. 일본의 대북한정책

가. 기초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기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한 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반도정책 기초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북한정권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북한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나. 정책

(1) 정치·안보 분야

과거 일본정부는 북한정부를 합법정부로서 승인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부로서만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미·일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추구하고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에 따른 한·소수교 및 한·중수교 그리고 북한의 대일접근 등으로 인하여 일본은 대북한 관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 과거청산 및 북한정권의 역사적 정통성 문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죄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 여부 및 사죄 표명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한 보상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정권의 출발시기를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운 항일무장 투쟁시기로부터 보고 현재의 북한정권을 그 연장선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현재의 북한정권과 항일투쟁시기의 항일운동세력과의 연결

이 약하거나 단절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과 함께 교전국간의 배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일본은 북한과는 전쟁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청구권의 관점에서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지역안보 문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남한의 핵보유를 자극하고 향후 통일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IAEA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 수락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IAEA사찰촉구에 대하여 자신의 핵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고 일본의 핵사찰 수용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및 핵연료 재처리 공장건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100만명의 현역군인과 12시간내에 500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경제·사회분야

(가) 교역 및 경제 협력

일본은 1972년 「日·朝간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여 일본의 북한무역은 수출입은행 용자와 장기연불수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의 대북한 무역은 일본이 자유주의국가중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4년부터 수출대금 및 플랜트 수출대금 약 7억 달러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 수출보험을 중단하였고, 현재 일·북한간 경제교류는 무역의 90% 이상이 조총련계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 기간시설 미비, 통신, 전력, 항만 등 시설의 미정비 등으로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은 서방 선진기술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조선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제정·발표하였다. 북한의 노력을 고려할 때 일·북한수교가 이루어지면 일·북한간 경제협력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인적교류

일본과 북한과의 인적교류는 1970년대에 들어와 학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 등 비정치적 목적의 입국이 인정되고 확대됨으

로써 점차 빈번해졌다. 특히 조총련에 속하는 재일동포들의 북한방문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다.

일·북한간 인적교류중에서 방북인사의 대부분은 조총련계 재일동포이나, 친북한인사와 북한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가 그리고 공무원 등 관계인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북한간 인적왕래 증대가 활성화되어 북한의 대외개방 필요성 인식이 높아질 경우 이는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관광객의 대민접촉 증대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촉진하여 체제 위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당국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북한간 인적왕래를 다시 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재일조선인 북송문제

일본은 인도주의 원칙을 명분상 이유로 내세워 1959년 2월 북한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재일동포에게 귀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이 명분상 인도주의 견지에서 허용한 재일한국인의 북송사업은 귀환 후의 생활고와 소식두절 그리고 이산가족 등의 새로운 인도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와 결혼하여 함께 북한으로 간 7,000명에 달하는 일본인 처들의 일시귀국과 자유왕래 허용문제는 일본정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인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일본의 대북한 관계정상화 추구

가. 배경

일본은 국제질서 및 동북아질서 변화, 미·일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그리고 남한의 북방정책 성공 및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하였다.

나. 현황

(1) 협상진행 상황

일본은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 전 부총재를 대표로 한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1990. 9. 24~28) 일·북한 수교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북한양측은 1991년 1월 30~31일에 제1차 일·북한수교회담을 개최한 이래 8차에 걸쳐서 수교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제8차 수교교섭(1992. 11. 5~6)에서 일본측이 이은혜와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하여 협상을 신중히 진행시키려는 뜻을 보이자 북한은 다음 협상 일자도 정하지 않고 수교회담을 종결시켰다.

(2) 의제별 협상 현황과 문제점

(가) 기본문제

일·북한 수교교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식민지 지배

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차이이다. 북한측이 제1차 교섭(1991. 1. 30)에서 제기한 것은 식민지지배는 불법이면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과거의 한 시기 일본과 북한사이에 불행한 관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과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 “한·일병합조약을 포함한 과거 제조약은 현재는 무효이지만 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입장(제2차회담, 1991. 3. 11)을 표명하고 있다.

일·북한교섭의 기본문제 중 국가승인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핵문제와 국가승인을 연계시켜 국가승인 문제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권관할권문제와 관련, 북한은 “조선은 하나”라는 입장에서부터 분단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은 남북이 두개의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분단이라는 현상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당한 관할권 범위를 기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은 제4차 회담(1991. 8. 30~9. 2)에서 북한의 관할권을 휴전선 이북으로 할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경제적 보상문제

북한은 식민지시대 일·북한관계가 국제법상 교전관계였다는 인식으로부터 전승국으로서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전후 40년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합법적인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법률에 의해 행해진 일은 합법이며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측은 국제법상 일본과 북한은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제2차 수교교섭)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배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북한수교교섭에서 일본의 기본입장은 경제문제를 재산청구권문제로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거증책임을 북한측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북한이 증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규모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국제문제

제3의제인 국제적 문제는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핵사찰을 북한이 수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는한 일·북한수교교섭은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제1차 수교회담).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북한의 핵문제가 미·북한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제1차 수교회담) 일·북한 수교교섭에서 보다는 미·북한 관계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의혹에 대한 해결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한 일·북한수교회담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사 재개되더라도 가시적인 회담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일·북한수교 전망

핵문제는 일·북한수교의 필수적인 현안으로서 이 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북한수교 교섭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보상형식 문제와 역사해석 문제로 일·북한 수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회담속도를 조절하여야 하고 일본 내에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므로 너무 수교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북한 수교교섭은 급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일·북한수교와 한국의 대응

1. 일·북한수교가 한반도 통일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 교차승인 및 남북한평화체제 구축

일·북한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미·북한관계 정상화도 촉진되어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일·북한수교로 촉진될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간 정치적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이고, 남북한의 본격적인 협상체제 진입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대남평화공존 정책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교차승인은 주변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 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

일본은 일·북한 수교 이후 북한측에 확보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4」 등 다자간 접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구축 조치 및 군축 조치들을 촉진하는 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 남북경협

일·북한 수교후 북한과 일본사이의 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대북한 배상 및 경제교류로 단기간내에 북한 경제난이 큰

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북한에 공여되는 배상자금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북한수교가 남북한 경협에 미칠 효과에 대한 전망과 관련, 북한은 일·북한수교 후 대일 경제협력력을 증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남한과의 부분적인 경협도 병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나,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남한과의 경협보다 체제안정과 선진기술 및 자본을 제공해 줄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경협은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라. 북한의 개혁·개방

일·북한수교는 북한의 개방을 부분적으로나마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일본을 비롯한 서방제국의 자본유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는 서방자본의 대북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개방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나친 대외개방이 체제붕괴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일·북한수교는 초기 단계에서 대외개방 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일 것이나 체제

개혁 면에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대응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 의하여 일·북한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경제교류가 증진된다면 이는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력 증대와 이에 따른 한국의 통일비용 감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북한수교는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일·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 및 상호 보완성 증대보다는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간 및 한 일간의 경쟁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일·북한 수교가 한반도통일 문제에 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우선 전반적인 대일관계를 새로운 전향적인 발상을 가지고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및 인정을 통하여 일본을 한반도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 협력 세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조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북한수교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협력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일·북한수교후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오판 등 안보상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한·미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등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를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데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한반도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러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일·중·러 3국간의 일정한 견제와 균형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하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독자적인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한반도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국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설득하여야 하고, 한반도통일로 야기될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통일한국에 대하여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일본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주변국들 공

동의 우려사항인 북한의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핵주권론 등도 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품교역에서 합작 투자와 같은 경제협력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目 次

序 文

要 約

第I章 序 論 1

第II章 냉전이후시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2

1. 동북아정세 변화와 일본의 역할증대 2

가. 동북아정세 변화와 일본의 인식 2

나. 일본의 대아시아 정치·안보 역할증대 4

2.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지속과 변화 19

가. 지속측면: 한·미와의 유대관계 지속 19

나. 변화측면: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북한
접근노력 21

다. 전망 23

第III章 일본의 대북한정책 24

1. 일본의 대북한정책 24

가. 일본의 대북한정책 기조 24

나. 정책 26

2. 일본의 대북한 관계정상화 추구	49
가. 배경	49
나. 현황	54
다. 일·북한 수교 전망	66
第Ⅳ章 일·북한 수교와 한국의 대응	68
1. 일·북한 수교가 한반도통일문제에 미치는 영향	68
가. 교차승인	68
나.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	69
다. 남북경협	71
라. 북한의 개혁·개방	75
2. 한국의 대응	76
参考文献	83

第 I 章 序 論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및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일환으로 대북한 접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으로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은 타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서 일본은 대북한 접근을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북한 접근은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한반도통일 경제론도 대두되고 있으며, 일본이 한반도분단을 영속화하려는 의도로 일 북한수교 및 독자적인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한 접근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대북한정책의 기조와 목표를 분석·검토하고 일본의 대북한정책 방향을 전망하려고 한다. 특히 일·북한 수교가 통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냉전이후시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1. 동북아정세 변화와 일본의 역할증대

가. 동북아정세 변화와 일본의 인식

최근 국제체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구소연방의 해체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국력약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오던 양극체제가 붕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블록의 이익이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블록의 안보이익을 위한 초강대국들의 약소국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원조나 양보가 더 이상 용인되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는 양극적 대결이 종식됨에 따라 국내경제 문제 해결에 몰두하게 되었고, 정치·군사적 이익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안보환경 변화로 양극체제를 기반으로 한 블록내의 결속이 약화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냉전시대에 형성되었던 동맹관계와 적대관계를 재검토하고 대외관계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¹⁾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양극체제의 붕괴와 미·러 두 초강대국 세력의 약화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상대적인 세력 강화 및 역할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의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소수교, 한·중수교 및 일·북한수교교섭이 이루어졌다.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으로써 국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최근 군사력 증강 및 남사군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데에는 당분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를 기반으로 정치·안보 분야에서 역할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 이제까지 일본은 국내적 제약과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지도적 역할수행을 자제해 왔고 국제문제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제 국제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미국 및 주변국들의 요구에 따라 국제문제에서 더욱 능동적 역할수행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주변강대국들의 역할증대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지역강국으로서의 지위확보와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일본은 아·태지역내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 일본은 걸프전에 대한 130억 달러 지원과 동유럽에 대한 20억 달러 지원 등 국제적 안보문제에 대한 경제적 역할을 증대한 바 있으며, 군사력 증강과 함께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통과(1992. 6. 15),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1992. 10. 14), 「미야자와 독트린」 발표(1993. 1. 16)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중국

·구소련 사이에 형성되었던 기존의 3극구조가 일본을 포함하는 4극체제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일본은 이 지역에서 타강대국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일본의 대아시아 정치·안보 역할증대

(1) 미·일관계 조정

아·태지역에서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를 가장 강력히 촉구하는 요인은 미·일관계 변화이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다원적 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내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과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리더십을 나누어 가지면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을 일본과 분담하려 하고 있다. 즉 미국은 1992년 1월 9일 「도쿄선언」에서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표명한 바와 같이 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국제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본과 역할분담을 해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군의 아시아 주둔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 및 아시아의 안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미군을 아시아에 계속 주둔시키면서 아시아지역 안보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²⁾ 그러나 미국은

2)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for the Asian Pacific Rim* (Washington DC: USDOD, July 1992), p. 20. 1993년 5월 4일 에스핀 미국방장관은 미·일 국방장관회담시 소련의 붕괴와 관계없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방실전배치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4, 1993.

상대적인 국력약화와 구소련위협 소멸로 인하여 역내 안보문제에 대하여 과거 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으로 하여금 미군의 아시아 주둔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미국을 대신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등 일본에 대하여 군사적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³⁾

또한 미국과 일본은 냉전종결후 세계질서의 재구축 과정에서 「유엔중심주의」를 표방하고 국제문제 해결에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미·일 안보체제의 지속 및 활동영역 확대를 모색하려고 있다. 이와 관련, 애스핀 미국방장관은 나카야마 일본방위청장관과의 회담에서(1993. 5. 3)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하는 자위대의 수송에 미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고⁴⁾, 일본방위청도 주일미군기지내 유엔평화유지활동요원의 공동훈련센터 설립 등을 포함 유엔평화유지활동에서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⁵⁾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아시아국가들에게 자본, 기술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제한된 대외원조 및 경제적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

3) 이와 관련, 애스핀 미국방장관은 나카야마 일본방위청 장관과의 회담(1993. 5. 3)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하는 일본자위대의 수송에 미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극동에 한정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왔던 기존의 미·일간 안보협력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군사협력을 제안하였다. 「朝日新聞」, 1993. 5. 5.

4) 「朝日新聞」, 1993. 5. 5.

5) 「朝日新聞」, 1993. 5. 13; 「讀賣新聞」, 1993. 5. 17.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⁶⁾ 나아가서 일본은 이러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안보적 발언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 「미야자와 독트린」

1993년 1월 16일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아세안순방중 태국에서 「아·태 및 일·아세안의 새로운 시대」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탈냉전시대 일본의 대아시아정책인 「미야자와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미야자와 독트린」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이 지역국가들과의 정치·안보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 일본은 일본·아세안의 협력증진을 통해 경제발전과 환경 및 문화유적 보전에 노력한다. 셋째, 일본은 인도차이나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도차이나의 사회간접시설과 인력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도차이나의 종합개발을 위한 포럼을 제의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미 경제력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아시아시장을 석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주장하는 동 선언을 천명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同 선언은 구소연방 해체이후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아직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이 미·일 역할분

6) Saburo Okita, "Japan's Role in Asia-Pacific Cooperation," *The Annals*, vol. 513(January 1991), pp. 25~37. 일본의 대아시아 무역비중은 1992년 총수출액의 34.2%와 총수입액의 31.9%에 달하여 일본·아시아 무역관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 1993.

답을 명목으로 자국의 정치·안보적 발언권을 강화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축이 군사력 우위로부터 경제력 우위로 이전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이 지역에 축적된 경제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정치·안보분야에까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은 동 선언에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군사력증강과 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를 통해 군사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실질 방위비는 나토방식으로 계산하면 507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한국의 예산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⁷⁾ 자위대 병력의 70%에 달하는 간부인력과 군사·과학기술 등 일본의 잠재군사역량을 고려할 때, 「미야자와 독트린」을 계기로 일본은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컨대,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안보적 역할 증대를 공식화하고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분쟁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관례화 내지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점진적으로 한반도에서도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경제

7) 前田壽夫, “『軍事大國 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料』, No. 151 (1993. 6), p. 66.

분야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에서 기술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⁸⁾

(3) 일본의 군사력증강 및 전략조정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56중기업무계획(1983~1987)」 및 「제1차 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을 통해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 등 지역적 군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해 왔고, 「제2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1~1995)」(총22조 7천5백억 엔)을 수립하여 호위함 현대화, 최신에미사일 도입, F-15 국산화 등 전진방어를 위한 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⁹⁾ 「제2차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른 주요장비의 도입계획과 수정된 계획 그리고 1993년 현재 진척률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또한, 일본은 2010년 까지 85톤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여 핵개발 잠재력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위대의 해상활

8)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集』 第19卷, 第3號(1991. 12), p. 66.

9) 1991년 말 구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미야자와 총리는 1991년 12월 「안전보장회의」에서 「제2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축소 조정을 지시하였으며, 대장성과 방위청사이에 절충을 거친후 「제2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경비총액을 금후 3년간(1993년~1995년) 5천8백억엔 정도 삭감하여 22조천 7백억엔(1990년도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2차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 총액(22조7천5백억엔)의 25%를 감축한 것에 불과한 액수이며, 일본은 이러한 계획 수정에도 불구하고 금후년평균 2.1%씩 군비확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pp. 64~66.

<표1> 中期防수정에 의한 主要裝備와 經費의 감축 및 達成狀況

		當初計劃	수정후 계획	削減數 (額)	91+92+93 年度 發注數	達成率 (%)	單價 (億円)
陸上 自衛隊	戰車	132兩	108兩	24兩	26+20+20兩	61.1	9.4
	火砲	716門	536門	180門	83+129+129門	54.3
	新多連裝로켓트 시스템	36兩	36兩	0兩	0+9+9兩	50.0	21.5
	裝甲車	218兩	193兩	25兩	42+34+34兩	57.0
	地對艦誘導彈	40基	40基	0基	8+8+8基	60.0	15.0
	對戰車헬리콥터	20機	18機	2機	6+4+2機	66.7	27.8
	輸送헬리콥터	14機	12機	2機	3+3+2機	66.7	59.3
海上 自衛隊	護衛艦	10隻	8隻	2隻	2+1+1隻	50.0	이지스함 1,148.7
	潛水艦	5隻	5隻	0隻	1+1+1隻	60.0	521.9
	對潛哨戒機 PC	8機	5機	3機	2+1+1機	80.0	136.4
	對艦헬리콥터	36機	31機	5機	5+7+4機	51.6	57.3
	掃海헬리콥터	1機	1機	0機	1+0+0機	100.0
航空 自衛隊	戰闘機 F15	42機	29機	13機	8+7+4機	65.5	136.9
	輸送機 C130	3機	1機	2機	0+0+0機	0.0
	輸送헬리콥터	2機	2機	0機	1+0+0機	50.0
	空中조기경보 기AWACS	4機	4機	0機	0+0+2機	50.0	569.8
	中等練習機	90機	68機	22機	21+19+9機	72.1	26.3
經費	방위비총액	22조7500억 엔(연평균 3.0%증)	22조1,700억 엔(연평균 2.1%증)	5,800억엔	[19+20+20%]	총합59.0	136.9
	전투장비계약액	5조엔	4조4400억엔	5,600억엔	[20+19+20%]	총합59.0

注: 經費는 90年度價格, []은 年度別達成率, 單價는 93年度豫算 計上價格

출처: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p.69.

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공식적으로 확대하여 일본의 방위개념을 전수방위로부터 지역방위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1월 이후 필리핀으로부터 일본 항공자위대 공군기가 필리핀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받는 등 클라크 미군기지로부터 태평양에 있는 영국기지를 지나 카이로에

이르거나 혹은 싱가포르-스리랑카-오만-카이로에 이르는 군사 항공로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최근 미군의 필리핀 기지로부터의 철수와 함께 일본의 방위영역이 1,000해리 지역방위 이상의 지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4)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일본은 국제문제에서 정치·경제 및 안보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원조계획(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세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및 세계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4차 해외원조계획 중기목표를 500억 달러로 책정하여 달성한 바 있으며(1988~1991년간 누계 380억 달러, 1992년 실적 120억 달러), 냉전종결과 미국과의 세계적 동반자관계에 따른 미·일 역할분담 및 일본의 정치·안보적 영향력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5차 중기목표를 제4차보다 50% 증가한 750억 달러로

10) Jung-Suk Youn,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Summer 1992), p. 375.

책정하였다.¹¹⁾

일본은 1991년 4월 대외 원조제공의 4가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원조제공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피원조국의 군사비,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무기 수출과 수입, 둘째, 민주화를 위한 노력, 셋째, 인권과 자유존중, 넷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이다. 이와 같은 지침 내용은 일본이 외국원조계획을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려는 것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가들과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서방선진국들도 이러한 조건들의 준수여부에 따라 제3세계에 원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¹²⁾

또한 일본은 제5차 중기목표에서 해외원조목표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바, 해외원조계획의 국민총생산(GNP) 비율을 1991년도 실적인 0.31% 이상으로 높여(유엔이 선진국에 권고한 원조비율은 0.7%) 무상원조를 확대하려 하고 있고, 환경대책 프로젝트, 난민대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본은 동서냉전의 종결이후 원조 필요성이 절실한 동유럽이나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해외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¹³⁾

11) 「朝日新聞」, 1993. 2. 26.

12) Takao Kawakami, "Guidelines for Foreign Ai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2, 1993.

13) 「朝日新聞」, 1993. 2. 26.

(5) 유엔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및 국제적 발언권 강화노력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국제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과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유엔 및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G7) 등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유엔을 통하여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한(1992. 10. 14) 데 이어,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1993. 3. 26). 일본은 이와 같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한 정치·군사적 실적을 쌓아 나가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자위대의 해외개입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제약과 국내의 반대여론을 내세워 군사적 해외개입을 회피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국제분쟁에서 일본에 대한 역할증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적으로 헌법을 확대 해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을 통과시켰으며,¹⁴⁾ 또한 앞으로 있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

14) 桶口恒晴, “集團的自衛權と國連軍への參加をめぐる政府解釋の變遷,” 「新防衛論集」第19卷, 第2號(1991年 8月), pp. 99~112.

법화하는 헌법개정을 위하여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¹⁵⁾ 최근 일본은 이러한 목적으로 갈리 유엔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촉구하는 국제적 분위기를 국내에 과시하였다. 미국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독일을 편입시키고 안보리 산하기구들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편안을 유엔에 공식 제안함으로써(1993. 6. 30) 일본에 대하여 상임이사국지위 부여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¹⁶⁾ 일본도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제의받을 경우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1993. 7. 6). 따라서 일본은 1995년을 목표로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위하여 유엔회원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유엔보다는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G7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이 회의를 국제적 발언권 증대를 인정받기 위한 국제무대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나카소네총리는 1985년 런던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서방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점증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15) 개헌논의를 촉진하는 대외환경과 개헌논의 쟁점에 대하여는 仲衛, “改憲論議と對外關係,” 『國防』, 第42卷, 第4號(1993年 4月), pp. 8~29.

16) 『朝日新聞』, 1993. 7. 1. 夕刊. 미국의 의견서에는 일·독 양국에 대한 거부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기존의 상임이사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은 거부권없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것을 선언하였다. 그 후 일본은 G7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와 한반도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 다자간 지역안보 주장

일본은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기구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면서 정치·안보적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7월 22일 나카야마 외무장관이 동남아국가연합 확대의 무장관회의(ASEAN-PMC)를 아·태지역의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이후, 미야자와 수상이 1992년 7월 2일 워싱턴 내셔널 크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캄보디아 등의 지역분쟁해결을 위한 공헌과 병행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ASEAN-PMC 등 기존의 대화의 장을 활용하여 다자간 안보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장래에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전지역 내 안보를 위한 정치적 대화의 틀을 만들자”는 구상을 제창하였다.¹⁷⁾

일본은 아·태지역의 다자간협의체 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17) 「朝日新聞」, 1992. 7. 3. 또한 일본은 민간차원에서 마쓰나가 노부오(松永信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의 카네기재단 그리고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등 민간 연구기관의 주도 하에 아·태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정부 차원의 3국회의(가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讀賣新聞」, 1993. 4. 5.

같은 두가지 접근방식(Two track approach)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소지역적 접근으로 한반도, 캄보디아 그리고 남지나해와 같은 지역분쟁이 존재하는 소지역별로 분쟁해결을 위한 지역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지역적 접근으로 우선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EC, 뉴질랜드 등이 참가하는 ASEAN-PMC를 활용하고, 후에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지역내 안보문제 토의를 위한 무대로 삼으며, 이러한 기존의 다자간 협의기구를 통해 안보문제 협의 실적을 축적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장차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전지역적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형 안보회의를 구축한다는 것이다.¹⁸⁾ 결국 일본은 장기적으로 아시아에 영향력이 있는 미·일·중·러 4강을 포함 전지역국가들을 포괄하는 안전보장기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발언권을 공식화 내지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미야자와수상은 1993년 1월 16일 태국에서 밝힌 「미야자와 독트린」에서도 이 지역국가들과의 정치·안보 대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일본이 제안한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변화가 관건인 바, 미국은 과거

18) 그러나 일본정부 내에는 “아시아지역에는 유럽과 달리 국가마다 너무 다양한 안보인식이 존재하므로 「아시아판 CSCE」 구상은 현재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朝日新聞」, 1992. 8. 25.

양자적 동맹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안보이익과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왔으나 최근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점차로 ASEAN-PMC 등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활용한 지역내 안보대화 증진에 대하여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향후 아·태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ASEAN-PMC와 APEC 등 기존의 대화의 틀을 이용한 안보협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점차 러시아, 중국, 베트남 및 라오스 등 역내국가 모두를 포함하는 전지역적인 안보협의기구가 창설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⁹⁾ 일본은 이러한 협의체들내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지역내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역할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영향력확대 수단을 통해 일본은 아·태지역 및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정치·안보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7) 일본 국내정치의 신보수화

일본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을 통과시켰으며(1993. 6. 18), 이를 계기로 국회 해산 및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1993. 7. 18). 투표결과 자민당은 과반수의석 (256석)을 획득하는 데에 실패함

19) 이와 관련, 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회의 고위급회담(ASEAN-PMC-SOM, 1993. 5. 20~21)은 내년부터 ASEAN-PMC에 중국과 러시아 및 베트남과 라오스도 초청하기로 합의하였다. 『朝日新聞』, 1993. 5. 22.

으로써(223석 획득) 1955년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 및 전통적인 보혁대립의 정치구도가 종식되었다. 반면, 개혁지향의 신생보수정당들의 급격한 부상과 사회당의 참패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⁰⁾

현재 일본정계에는 연립정권 창출을 위한 치열한 세력 규합 공작이 벌어지고 있으며, 1) 자민당 소수단독정권 시나리오 2) 자민당주도 연립정권 시나리오 3) 비자민계 정당 연립정권 시나리오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위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실현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자민당의 개혁파와 수구파, 사회당의 좌파와 우파가 분열하여 정당간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경우 보수적인 2개정당이 경쟁하는 양당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정계재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당분간 정당구도 재편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확고한 리더십이 부족한 차기정권하에서는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급격한 정책변화나 혹은 통상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²¹⁾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통해 비교적 대등한 세력으로 형성될 2개의 보수정당은 첫째, 자민당 주류 보수정치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안보정책과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익신장과

20) 종전에 의석이 없던 日本新黨은 35석으로, 新生黨은 36석에서 55석으로, 사키가케(先驅)는 10석에서 13석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朝日新聞」, 1993. 7. 19.

21) Michael Richardson, "Asians Worry About Weak Tokyo Rul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9, 1993.

생활대국을 내세우는 정당과 들쭉, 헌법, 자위대법 등의 개정을 통해 패전국 일본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보다 대담한 대외 정책을 전개하여 강대국 일본을 지향하는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양대정당이 활발한 정책 대결을 통하여 일본정치를 이끌어 갈 경우 일본의 국내정치는 민주화와 생활대국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대외정책은 민주주의의 국내적 제약속에서도 일본 자신의 국가목표와 이익에 기초하여 보다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²²⁾ 이에 따라 미·일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新生黨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역할 증대를 주장해 왔으며, 하타 쓰도무(羽田 孜)도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과거사로 인한 부담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아시아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 보수양당체제가 형성되고 오자와의 신생당과 같은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과거 보혁대결 구도하의 사회당과 같은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적 역할증대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2) Norman D. Levin, "Japan After the Vote: Unchanged but with Continuing Trend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9, 1993.

2.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지속과 변화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일본은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아시아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중요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정치·경제 및 안보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첫째,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일본은 자국에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설립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일본은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바라며, 미·중·러 등 타강대국이 한반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²³⁾

가. 지속측면: 한·미와의 유대관계 지속

일본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하에 내심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전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동북아의 국제질서, 미국의 동북아정책 그리고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왔다. 일본은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적인 환경 및 미국의 동북아

23)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Spring 1992), p. 33.

정책 변화 그리고 남북한관계 진전 및 한국의 對日壓力 등을 고려하면서 시기별로 한국일변도정책으로부터 대북한 접근 적극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변화를 보여왔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 편향된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일본은 닉슨독트린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 및 미국의 대아시아정책 변화에 따라 1970년대초반까지 적극적으로 대북한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대부분의 기간동안 동북아의 신냉전분위기에 따라 한국편향의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동북아전략 및 한·일관계를 고려한 한국편향의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였다.²⁴⁾

더욱이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적 이해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한국을 의식하여 대북한 접근을 신중히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간의 무역규모는 1966년 3억 6천만달러였고 그 이후 계속 증대하여 1989년 310억달러가 되었던 반면 일·북한간의 무역은 1962년 1000만달러와 1963년 1500만달러를 기록한 이래 일본의 대북한 접근이 적극 시도되었던 1974년에는 3억 6천만달러, 최고의 무역고를 기록하였던 1988년에도 5억5천만달러에 불과하여 일·한국간 무역에 비하여 1/100 내지 1/6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교이후 1989년까지 누계 516억달러의 무역흑

24) 출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3~19.

자를 기록하였고 연간 60억 내지 9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본의 상품시장으로서의 가치면에서 한국을 북한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면에서 일본은 북한의 합영법 제정(1984. 9)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대북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하여는 1962~88까지 30억달러 89년 4억 5천만달러의 투자를 기록하는 등 대남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대한국 차관도 증대하고 있다(1989년 말 현재 75억달러).²⁵⁾

나. 변화측면: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북한 접근노력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은 기회있을 때마다 대북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소봉쇄라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한국과 전략적 유대의식을 가지고 정치·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일변도의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지만(특히 한·일국교 수립이후), 1969년 「닉슨 독트린」이후 미국이 아시아 및 동북아에서 역할축소를 공식화하는 등 정치·안보역할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본은 자국의 정치·경제 및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정책에서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고자

25) 오정근, “일본자본의 한국진출 현황과 전망,” 「일본평론」, 제4집(1991 가을·겨울호), pp. 197~226; Tamaki Moto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4(Winter 1991), pp. 72~76.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닉슨 독트린」이후 데탕트시기(1969~79)에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정치·경제적 차원의 대한국 우선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하여 북한에 대한 접근을 적극 모색하였다.²⁶⁾

비록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이 동맹국들과 구소련에 대한 군사협력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였지만, 1981년 「외교청서」에서 북한과 경제·문화교류를 계속 증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²⁷⁾ 1983년 랑군 테러사건으로 취해졌던 대북한제재조치도 1984년 말 해제함으로써 상황이 호전되면 대북한 관계개선을 다시 추진해 나갈 뜻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 미국은 냉전체제 붕괴와 미국내 급박한 경제문제 해결 필요성으로 인하여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있으며 미·일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시아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 안보문제에서 발언권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적으로 헌법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작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내에서 안보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남한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상대적으

26) 줄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pp. 8~11.

27) 日本外務省, 「外交青書:わが外交の近況」, 第24號(昭和 56年版), p. 18.

로 약화된 대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차 대북한 접근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전망

한·일 국교수립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한반도에서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냉전이후시대 미·일 역할분담 및 경제적 영향력을 중시하는 국제질서 변화속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반도에서도 정치·경제·안보문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북한 접근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한·미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로 상당기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한국에 갖고 있는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편향의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三章 일본의 대북한정책

1. 일본의 대북한정책

가. 기초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대한반도정책 기초의 테두리 내에서 형성된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기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한 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반도정책 기초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북한정권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북한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국제적인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북한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관계개선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여타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일본의 대북한 영향력이 증대하지 못한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정치대국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의 정치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견지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 이익 증진이다. 북한의 경제규모나 일·북한간 경제교류 실적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이익은 단기간에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재산청구권 방식의 보상과 경제협력자금 등 공공차관은 일본기업의 상품 및 용역을 북한에 수출하는 자금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를 비롯한 민간경제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지리적 인접성과 저임금 그리고 최근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대북한 투자여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한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대북한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모색하였으며 외교관계 수립을 관계개선의 궁극적 목표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국제정세는 일본이 북한과 국교수립 등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범위와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동북아전략 및 한국과의 관계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한관계 진전여부를 고려하여 한국과 우선적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북한과는 경제·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와 민간차원의 교류에 한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경분리정책을 취

하여 왔다.

나. 정책

이상과 같이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북한에 대하여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정치·안보분야에서 적대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류를 용인하는 이중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 정치·안보 분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9년 「물타선언」에 따른 냉전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남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국편향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북한과 적극적인 관계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일본정부는 북한정부를 합법정부로서 승인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부로서만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즉, 일본은 1955년 북한 외교부장 남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교섭제의를 남북한 쌍방승인 불가원칙에 따라 거부하였고, 북한을 「침략자」라고 낙인을 찍은 유엔의 결의와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 양국은 이러한 유엔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일본과 북한과의 국가관계 수립가능성을 법적으로 배제하였다. 더욱이 북한지지도체인 조총련을 파괴활동방지법의 적용단

체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을 적대적인 지역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사이에는 국가간의 외교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친북한 인사들 및 정당 등의 채널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또한 양국간의 구체적인 현안문제도 특정한 개인 및 정당의 중개로 해결하여 왔다.²⁸⁾

그러나 일본과 북한은 지리적 및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양국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었다. 일본은 북한과 정치적으로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차원에서는 제한된 무역 등 경제관계를 묵인하는 이른바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일시적인 데탕트시기를 맞이함에 따라 1957년 9월 양국은 민간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간접무역과 민간인 교류를 시작하였고, 1962년 12월에 일본이 직접결제방식을 인정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63년에는 북한의 대외운수회사와 일본의 해운회사간에 정기선박의 왕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에 정기적으로 선박운행이 시작되었다.

그후 1970년대 초에도 일본은 「닉슨 독트린」 이후 미·중화해로 시작된 동북아의 데탕트구조 속에서 대북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일본은 1971년 자민당의 구노슈찌(久野忠治) 의원을 포함한 자민·사회당 의원 등 240명으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28) 이러한 역할을 해온 인물들은 주로 사회당과 소위 진보적인 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자민당내 좌파에 속하는 인사들, 특히 久野收, 宇都宮德馬, 石井一等 日·朝友好協會와 日·朝友好議員聯盟에 속하는 인사들이다. 김동훈, “일·북한관계의 변화전망과 통일문제,” 「안보연구」, 제22호, 1992, pp. 61~62.

구성하여 정치적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패망 및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일본은 한국과 안보유대를 다시 강화하고 대북한 제재에 참여하는 등 한국 편향의 대한반도정책으로 돌아섰다.

이어서 1980년대 일·북한관계는 북한의 대남한 테러에 대한 일본의 대북한 제재와 일본의 후지산마르(富士山丸)호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억류로 냉각관계를 지속하였다.

결국 냉전시대 일·북한 관계는 일본의 지속적인 대북한 접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국의 대일압력 등으로 인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일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 추구하고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에 따른 한·소수교 및 한·중 수교 그리고 북한의 대일접근 등으로 인하여 일본은 대북한 접근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간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과거청산 및 북한정권의 역사적 정통성 문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죄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²⁰⁾

최근 일본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북한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 및 사과 요구에 대하여 성의를 표시하기 시작하였지만,²⁹⁾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지배로 보는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과 성실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³⁰⁾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 여부 및 사죄 표명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한 보상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하여 원칙론적인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정권의 출발시기를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운 항일무장 투쟁시기로부터 보고 현재의 북한정권을 그 연장선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항일투쟁과 관련되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 북한은 일·북한 수교회담에서도 이 문

29) 김옥렬, 「한국과 미·일관계」(서울: 일조각, 1973), p. 35.

30) 다케시다 일본 前총리는 1989년 3월 국회발언을 통해 위의 요구내용이 반영된 사죄발언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일·북한간 수교교섭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31)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일본내에서는 진보적 지식인들 및 좌파정당인들이 대변하고 있다. 山本剛士, 「日朝交流の現状と問題點」 「提言・日本の朝鮮政策」(東京: 岩波書店, 1989), p. 4~5.

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일·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남한의 문헌에 의존하면서 북한 현지도집단이 과연 항일운동의 주체적인 세력이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김일성이 해방 당시까지 무장투쟁을 하였던 그 명성있는 김일성과 동일인물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도집단이 항일운동을 하였다면 실제 그 세력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일본정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문헌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북한정권과 항일투쟁시기의 항일운동세력과의 연결이 약하거나 단절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³²⁾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관계되는 항일무장투쟁 인정문제는 일·북한 사이에 보상문제와도 연관되어 양측간에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과 함께 교전국간의 배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일본은 북한과는 전쟁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청구권의 관점에서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³³⁾

최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에는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부가 존재함을 북한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자신만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지닌 정부로

32) 佐佐木春隆, 「韓國獨立運動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85), pp. 830~47.

33) 中平立, 「日朝交渉の現場から,」 「外交フォーラム」(1992年 2月), pp. 46~50.

인정받으려는 요구가 무리한 주장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일항쟁론에 입각한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 및 합법성 주장은 일·북한간 수교교섭이 진전되어 가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지역안보 문제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문제를 양국간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1950년대 이래 핵개발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며, 1980년대 초부터 소형원자로의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1985년 12월 구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개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역내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자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남한의 핵보유를 자극하고 향후 통일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우려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왔다.³⁴⁾

34) 森本敏, “九十年代末に緊迫する東北アジア,” 『世界週報』, 1992. 4. 28, p. 14.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集』 第19卷, 第3號(1991. 12), p.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하여 일·북한간에 문제시되었던 사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1985. 12)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적인 핵안전협정 체결을 미루어 온 사실에 있다. 처음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내용이 잘못된 문서를 평양에 보내고 1987년 6월에 정확한 문서가 도착함에 따라 새로이 18개월이라는 기간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이어 1990년에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입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서방측으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³⁵⁾

북한은 1990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과의 회합에서 NPT에 가입한 이유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핵무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합의문서에는 두개의 수정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정내용으로는 첫째, 핵보유국(미국)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보유국(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북한에 대하여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한반도로부터 철거시킬 것을 요구하였다.³⁶⁾ 이후 북한은 핵안전협정 조인을 지연시키거나 특별핵사찰을 거부하면서 핵개발 의혹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35)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no. 83 (Summer 1991), p. 87.

36) *Ibid.*, pp. 90~91.

일본정부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의 우려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유로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인과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자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동북아 및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핵무기의 반입에 대하여는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미국핵무기 반입금지를 목표로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보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 남북한비핵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⁸⁾

일본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이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압력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가 중국의 중재와 미·북한간 협상으로 해결되려는 양상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약화된 자국의 대북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북한접촉을 시도하였다(1993. 4. 7, 4. 13).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고집하고 일본의 접촉제의를 거부하였으며,³⁹⁾ 미국과의 뉴욕회담을 통해(1993. 6. 11)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37) 豊田利幸 編著, 「太平洋非核化構想」(東京: 岩波新書, 1990), pp. 61~82.

38) Koji Kakizawa,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Summer 1992), pp. 61~62.

39) 「朝日新聞」, 1993. 4. 21.

도출하려 하였다. 이에 일본은 도쿄 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북한핵위협이 존재하고 핵보유국과 비핵국사이가 불평등하다는 점을 들어 1995년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연장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국 핵정책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입지 확보와 북한핵문제에 대한 서방선진국들의 보다 강경한 조치를 바라는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1993. 7. 8).⁴⁰⁾

이러한 일본의 IAEA사찰촉구에 대하여 북한은 자신의 핵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대북한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1993. 5. 8) 후에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을 수락하였다. 미·북한 양측은 제네바회담(1993. 7. 19)에서 북한이 IAEA와의 협상 및 남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한회담을 재개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측이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함한 무력사용 및 위협을 포기하고 북한핵시설을 경수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1993. 7. 19).⁴¹⁾ 미국은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핵위협 완화와 IAEA사찰의 공정성 제고 등 북한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철회와 IAEA핵사찰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의

40) 「朝日新聞」, 1993. 7. 9.

41) 「朝日新聞」, 1993. 7. 20 夕刊.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및 핵연료 재처리 공장건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11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반입한 데 이어 1993년 4월 28일 아오모리(靑森)縣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세계최대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함으로써, 지난해 건설된 우라늄 농축공장과 저수준 방사성 폐기물 매설센터를 가동한 데 이어 핵연료 리사이클 계획에 필요한 3개 시설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⁴²⁾ 따라서 일본은 핵무기 전환이 용이한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은 자국이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명백한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³⁾

북한은 이러한 일본의 플루토늄 확보 노력 및 핵재처리시설 건설 노력을 자신에 대한 핵사찰 수용 압력 및 재처리 시설 철폐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⁴⁴⁾ 향후

42)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プ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pp. 43~53.

43) 그러나 주변국들은 일본이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플루토늄 확보시도가 원자력발전을 위한 원료 자금계획의 일환임과 동시에 핵개발능력을 보유한 잠재적 핵강국으로의 부상 및 이를 통한 국방·외교·안보 면에서의 입지 강화 의도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Jessica Mathews, “Think Again: Plutonium Is a Rogue White Elephan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7, 1992.

44) IAEA이사회에서(1992. 9. 16~18) 북한대표는 일본의 플루토늄계획이 민간 플루토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선 과도한 량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제

북한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한 이후에도 일본이 계속 남북한비핵화공동선언을 근거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북한은 일본의 핵재처리시설 건설을 문제삼고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100만명의 현역군인과 12시간내에 500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방위청은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극동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⁴⁵⁾ 1993년 5월 29일 실시된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 성공을 계기로 도쿄를 포함한 일본關東 지방이 북한 「노동1호」의 사정권내에 들었다 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⁴⁶⁾ 또한 일본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6차 일·북한수교회담에서도 북한측은 일본의 플루토늄 축적상황을 지적하였다. 田中晴政, “核擴散: イメージ現實の乖離,” 『國際問題』, no. 397(1993년 4월), p. 30; 『朝日新聞』, 1992. 2. 2.

45) 방위청 編, 『防衛白書』(平成4年版, 1992), p. 74.

46) 『朝日新聞』, 1993. 6. 11 夕刊. 그러나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 성공 사실이 뒤늦게 발표된 데에 대해 일본내에서는 두가지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방위청의 정보수집 능력 미비 혹은 미·일간의 협조체제 약화 때문이라는 해석이고, 둘째는 미·일간에 이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노동1호」 발사실험 성공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일의 정보수집 능력이 북한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실험 사실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있었으나 북한에 유화적인 결과를 도출한 미·북한간의 뉴욕회담결과(1993. 6. 11)에 불만을 품은 일본정부인사(石原信雄 內閣官房副長官)가 비밀유지 합의를 어기고 발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일본언론들은 두번째 해석을 더 신빙성 있는 해석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언론은 이같이 일본정부인사가 비밀유지 약속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미국방부와 미중앙정보국(CIA)이 항의하지 않은 것은 대북한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 미국내 두 기관들이 북한에 대해

오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⁴⁷⁾ 일본은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시아 역내국가간 혹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및 군축노력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설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간에 논의될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⁴⁸⁾

또한 일본은 일·북한수교이후 북한에 제공될 경제원조를 수단으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적 위협 요인 완화를 위하여 대북한 개혁·개방압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⁴⁹⁾

(2) 경제·사회분야

(가) 교역 및 경제 협력

일본은 대북한 정·경분리외교에 따라 북한과 민간수준에서 제한적 경제교류를 실시하여 왔다. 1957년 9월 27일 일조무역회와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의 「일조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북한과 간접무역이 이루어졌으며, 이게다 내각(1960. 7 ~ 1964. 7)의 대공산권 교역확대를 위한 정경분리정책으로 북

여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무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西岡力, 「核」外交の成功に自信深めた北朝鮮, 「世界週報」, 1993. 7. 6, pp. 16-19; 長谷川熙, 「北朝鮮のミサイル實驗, 自衛隊は本當に知らなかつたのか」, AERA, Vol. 6, No. 27(1993. 6. 29), pp. 60~61.

47) 森本敏, 「九十年代末に緊迫する東北アジア」, 「世界週報」, 1992. 4. 28, p. 14.

48)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集」第19卷, 第3號(1991. 12), p. 66.

49) 關谷道春, 「間接防衛論」, 「國防」, 第42卷, 第4號(1993年 4月), pp. 52~56.

한과의 직접무역이 허용됨에 따라 교역이 급격히 확대(1963년 무역총액 1,500만 달러)되었다.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과 1973년 「6·23 평화통일의교정책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다나카 내각은 문화, 스포츠로 한정되어 오던 북한과의 인사교류를 경제기술교류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일조건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여 일본의 북한무역은 수출입은행 용자와 장기연불수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국간 무역관계자와 기술자 교류 및 상품전람회 개최가 허용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대북한 무역은 1974년 수출 2억 5천만 달러, 수입 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일본은 자유주의국가중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1984년부터 수출대금 및 플랜트 수출대금 약 7억 달러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 수출보험을 중단하였고, 현재 일·북한간 경제교류는 무역의 90% 이상이 조총련계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⁵⁰⁾

일본의 대북한 수출품목은 기계류, 전기기기, 귀금속, 수송기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화학품, 농약 등도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북한 수입품목은 귀금속류, 동물성 생산품, 섬유, 광산물, 식물성 생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은 1987년 이후 대북한 무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무역적

50) Teruo Komaki, "North Korea Inches Toward Economic Liberalization,"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2(Summer 1992). p. 169.

자를 기록하고 있다.⁵¹⁾

일·북한무역이 계속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간 무역에는 주변 정치상황 및 COCOM 규제 등 정치·안보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업성만을 위주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기 어렵다. 둘째,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은 민간차원의 무역에 국한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신용문제, 북한 내수시장의 협소 및 무역상품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본은 본격적인 무역에 대하여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도 외화부족과 국내 경제난으로 무역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특히 일·북한간 무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일본에 대한 결제대금의 미지불 등은 일·북한 무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⁵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91년도에 북한의 제2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1991년도 양국간 교역총액은 약 5억 달러로 일본의 대북한수출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약 2억 2천만 달러, 대북한수입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2억 8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대북한 무역 추이는 <표 2>와 같다.

일본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 기간시설 미비, 통신, 전력, 항만 등 시설의 미정비 등으로 직접투자가 본격

51)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경제와 무역전망, 1991년판」(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2), pp. 84~94.

52) Ibid, p. 84.

<표2> 일본의 대북한 무역 추이

(단위: 1000달러)

년 도	수 출	수 입	총 계	수 지균형
1962	4,781	4,553	9,334	228
1963	5,347	9,430	14,777	-4,083
1964	11,284	20,231	31,515	-8,947
1965	16,505	14,723	31,228	1,782
1966	5,016	22,692	27,708	-17,676
1967	6,370	29,606	35,976	-23,236
1968	20,748	34,032	54,780	-13,248
1969	24,159	32,186	56,345	-8,028
1970	23,344	34,414	57,758	-11,070
1971	28,907	30,059	58,966	-1,152
1972	93,443	38,311	131,754	55,132
1973	100,160	72,318	172,478	27,842
1974	251,914	108,824	360,738	143,090
1975	180,630	64,839	245,469	115,791
1976	96,056	71,627	167,683	24,429
1977	125,097	66,618	191,715	58,479
1978	183,347	106,862	290,209	76,485
1979	283,848	152,027	435,875	131,821
1980	374,305	180,046	554,351	194,259
1981	290,995	139,476	430,471	151,519
1982	313,162	152,026	465,188	161,136
1983	327,077	126,149	453,226	200,928
1984	254,719	145,218	399,937	105,501
1985	247,069	179,293	357,220	67,776
1986	183,971	173,229	455,483	10,742
1987	213,739	241,744	563,532	-28,005
1988	238,883	324,649	495,532	-85,776
1989	197,001	298,678	495,679	-101,677
1990	175,900	300,282	476,182	-124,382
*1991	220,000	280,000	500,000	-60,000

출처: 日朝貿易會,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貿易通關統計 1990」

* 표는 한국무역협회, 「북한경제지표 1992」

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합영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日·朝貿易會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한 순수 일본계 기업의 대북진출이 시도되었다. 북한은 일본재계인사를 초청하여 어업 분야, 금 및 비철금속 채광 분야, 식량 및 의류 등 경공업분야, 제련소 재건 등 철강분야 및 기계부품 제조분야, 그리고 합성고무분야에서 일본과 합작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⁵³⁾ 그러나 일본업체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망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소수의 조총련계 기업인들만이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합영의 건수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북한에서 84년 9월 합영법 공포이후 1991년 9월 현재까지 7년동안 가동중인 합영기업의 정확한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100여사의 합영사가 북한내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70% 이상이 조총련과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합작 투자 총액은 132억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최근 일·북한간에 관계개선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북한에 무역 및 투자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日·朝貿易會 소속회사 이외에 한국, 홍콩 등에 투자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북한과 합영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수교상태

53) 북한은 가와가츠 텐(川勝傳) 南海電鐵회장을 초청하여 비망록을 통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 Tomaki Moto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pp. 75~76.

54) 「내외통신」, 주간판, 제 816호, 1992. 10. 8.

인 북한과 직접거래를 함으로써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 교류보다는 계열 기업의 대북한 전문 교역업체를 중계회사로 활용하여 왔으나, 향후 일·북한간 수교 시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상금이 일본의 기계, 설비 및 플랜트 공급부문에 상당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북한 진출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여하고 있는 조총련계 기업 및 일본기업들과 자금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관행상의 제휴와 지분참여 등을 통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최근 일·북한수교에 대비해 산업현황 파악, 북한내 주요 프로젝트 및 투자여건조사 등 기획 및 기초조사단계를 매듭짓고 거물급 중견인물(도당관계자, 지방공단 책임자 등)과의 인적관계 형성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의 동아시아 무역연구회와 日·朝貿易會는 1991년 4월 평양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개발 수익사업 업종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어서 협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2년 7월 14일~21일 제2차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이 일본의 경제교류조사단에는 미쓰비시, 미쓰이, 마루베니 등 일본의 대기업 플랜트 담당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⁵⁵⁾

한편, 북한도 최근 서방 선진기술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조선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

55) 「讀賣新聞」, 1992. 7. 9.

인 투자관련법을 제정·발표하였다. 이 법들은 1984년 9월 제정된 「합영법」을 대폭 개선·보완한 것이며,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총괄적인 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선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하여 수출입품목의 비관세와 果實送金 허용, 최고 50년간 토지임대 등 특혜조항들과 함께 투자여건의 다변화를 위한 각종보장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외국인투자법」은 북한내의 어떤 지역에서도 합작·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특히 나진·선봉지구 등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과거 합영법에서 금지하였던 외국인 100% 출자를 허용하였다. 또한 이 법은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외국투자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욕과 취지를 반영하였다.⁵⁶⁾

비록 「조선외국인투자법」이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외국인 단독투자를 자유무역지대내로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 효과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일·북한 양측이 일본의 대북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북한수교가 이

56) 「내외통신」, 주간판, 제818호, 1992. 10. 22.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과거 합영법에서 합영대상을 외국인외에 조총련동포를 비롯한 해외거주 동포로 한정했던 것과는 달리 “공화국 영역밖에 조선동포들도 합작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기업과 기업가들도 합작대상에 포함하였다.

루어지면 일·북한간 경제협력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북한수교 후 중·장기적으로 대북한 투자환경이 호전되어 일본 대기업들이 대북한 진출을 적극화할 경우 북한경제의 대일의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인적교류

일본과 북한과의 인적교류는 1960년대까지 일본의 사회당·공산당 등의 진보적인 단체에 속하는 정치인 혹은 친북한인사들의 북한방문 등 일방통행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1964년 동경올림픽 당시 선수단의 입국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학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 등 비정치적 목적의 입국이 인정되고 확대됨으로써 인적왕래는 점차 빈번해졌다. 특히 조총련에 속하는 재일동포들의 북한방문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의 재입국 허가자가 1971년에 27명에서 1979년에는 2,57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말에는 13,69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송귀국자의 수가 1985년 이후 최근 들어 10명 이내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북한의 실상이 알려져 북한으로 귀국하려는 재일동포가 감소한 반면 이전에 귀국한 가족 친지의 안부를 걱정하여 북한을 방문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⁷⁾

일·북한간 인적교류중에서 방북인사의 대부분은 조총련계 재일동포이나, 친북한인사와 북한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가 그리고 공무원 등 관계인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적교류는 간접루트인 중국 및 러시아 경유 북한입국 경로 이외에 만경봉호 등 정기선박과 전세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일·북한간에 정기항공노선은 없으나 나고야, 니이가다에서 전세기가 취항중이며, 1992년 1월 24일에 일·북한 항공당국자는 연간 80편의 전세기 운항 계획에 합의하였다.

일본은 오사카, 고베, 큐우슈우, 니이가다와 북한의 남포, 청진, 원산을 잇는 부정기선을 운행중이며, 니이가다-원산간에는 1959년 이후 조선항로라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1992년 6월 2일부터 매주 1편씩 만경봉 92호가 물자와 승객을 운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북한간 인적왕래 증대가 일본의 간접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효과를 발휘함으로써⁵⁷⁾ 일·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

57) 佐藤勝巳, 「崩壊する北朝鮮」(東京: ネスコ/ 文藝春秋, 1991), p. 167, p. 175.

58) 1990년 재일조선인 13690명이 북한 친지를 방문하였는데 이들은 1인당평균 300만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합계하면 약 410억엔이 되며 재일조총련이 모금한 금액을 합하여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송금된 액수는 연간 600억엔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1엔 = 0.75원 비율로 환산하면 450억원이 되는 바, 1990년도 북한국가예산이 35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재일조선인을 통한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액수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 등 북한의 대일적대행위가 지속 될 경우 재일조선인의 북한방문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佐藤勝巳, 「金正日の「悪魔の選擇」,」 「文藝春秋」, 第71卷, 第5號(1993. 5), pp. 205~06.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사회의 실태를 확인한 사람들의 대북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양국간에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 북한의 대외개방 필요성 인식이 높아질 경우 이는 북한사회 전반

<표3> 재일조선인의 북한귀국자수와 북한방문후 일본재입국허가

년 도	북한귀국자수	일본재입국허가수
1959~1970	88,611	15
1971	1,318	27
1972	1,003	29
1973	704	357
1974	479	489
1975	379	539
1976	256	518
1977	180	1,016
1978	150	1,530
1979	126	2,579
1980	40	4,273
1981	38	4,344
1982	26	4,489
1983	0	4,275
1984	30	5,925
1985	0	7,589
1986	0	8,608
1987	1	11,224
1988	2	11,772
1989	3	14,855
1990	0	13,690

출처: 佐藤勝巳, 「崩壊する北朝鮮」(東京: ネスユ/文藝春秋, 1991), p. 167, p. 175.

에 대한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일본관 광객의 대민접촉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촉진하여 체제 위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당국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북한간 인적왕래를 다시 억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북한간의 인적왕래와 이의 개방압력으로서의 역할 여부는 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 및 체제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일·북한간 인적교류의 전개상황은 <표 3>과 같다.

일본은 재일 한국인들을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차별 및 관리대상으로 대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인권단체 民鬪連(민족차별과 싸우는 연락 협의회)을 통하여 재일조총련동포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9개항목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하였다. 그 중 이 民鬪聯이 재일조선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시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총련에 대한 적대정책 중지, 둘째, 재일 조총련교포의 국적보장, 셋째, 외국인등록법의 개정, 넷째, 출입국의 자유보장, 다섯째, 민족교육에 편의와 협력 제공, 다섯째, 재일동포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보장, 여섯째, 식민지 지배에 있어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다.⁵⁹⁾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재일한국·조총련 동포들의 처우,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고도성장으로 경제대국화를 이

59) 김광욱, "일본정부의 대북한국교교섭에서의 진보층의 압력에 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권, 3호(1991년 가을), pp. 276~79.

른 일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물질적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진보적 지식인 본연의 이상주의적 입장과, 경제대국으로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본의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한 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일본내 법적·사회적 지위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북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유일한 예가 재일조선인의 북송사업이었다. 일본은 인도주의 원칙을 명분상 이유로 내세워 1959년 2월 북한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재일동포에게 귀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재일조선인의 북송을 허용함으로써 단일민족의 일본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조선인들을 합법적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959년 4월 13일부터 북한과 적십자사간 교섭을 시작하여 적십자국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캘커타에서 「재일조선인 귀환협정」에 조인하였다.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도주의적 명분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짐으로써 일본은 북송사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59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된 북송교포수는 1990년까지 93,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실상이 알려짐에 따라 귀국자는 현저히 감소하여 1985년 이후 10명 이내로 감소하였다.

일본이 명분상 인도주의 견지에서 허용한 재일한국인의 북송사업은 귀환 후의 생활고와 소식두절 그리고 이산가족 등의 새

로운 인도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와 결혼하여 함께 북한으로 간 7,000명에 달하는 일본인 처들의 일시귀국과 자유왕래 허용문제는 일본정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인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일본의 대북한 관계정상화 추구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1988. 7. 7)과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전개로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일본은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 전 부총재를 대표로 한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 (1990. 9. 24~28) 일·북한 관계개선 교섭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은 대북한 관계개선 추진을 통하여 탈냉전의 세계적 조류 속에서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가. 배경

(1) 국제적 환경변화 및 한국의 북방정책

일본은 국제질서 및 동북아질서 변화, 미·일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그리고 남한의 북방정책 성공 및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북방정책, 특히 한·소정상회담 및 수교에 대해

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대소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일본 지도자들은 구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에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외교의 대소 이니셔티브에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북방정책은 러·중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역에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러·중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북한 수교원칙을 천명하고 대북한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북한의 대일접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정치·경제 및 안보적 필요에 의하여 대일접근을 모색하여 왔으며, 최근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대일접근을 적극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경제의 부진 및 남북한 경제격차의 확대이다. 북한은 농업생산 부진, 생산설비 가동률 저하, 에너지 부족 등이 심각하여 장기간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⁰⁾

60) 김일성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목표년도인 1993년 신년사에서 7개년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바, 이는 동 계획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된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에는 1992년 러시아 북한간 거래가 구상무역에서 경화에 의한 결제로 전환된데 이어 중국도 1993년부터 경화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외화부족 상태인 북한의 위기감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은 구소련 및 동구의 변화 때문에 과거 정치·군사 및 경제적 유대를 가지고 있던 국가와의 동맹관계가 불안정하게 된 바, 이러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일수교에 나서게 되었다.

셋째, 김일성, 김정일 후계체제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부진의 극복이 불가피한 과제이다.

1990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 자민당과 사회당의 방북동안에 일본측 대표단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전제로 일본과 북한간의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북한측은 일본의 예상을 앞질러 정부간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다.

(3) 일본자민당의 국내정치적 고려

일·북한 수교교섭 추진에는 사회당과의 타협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당의 대북한 관계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

민당내 실력자의 배려가 작용하였으며, 자민·사회당이 공동으로 대북한 접근이니셔티브를 취하고 후에 외무성이 이에 추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즉 전자민당부총재이며 당내 실력자인 가네마루 신(金丸信)과 일본사회당 부위원장 다나베 마코토(田邊誠)가 일·북한접근에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후에 외무성이 뒷수습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남한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따라서 일·북한간 주요 의사소통 창구는 1990년까지 일본사회당이였다. 일본사회당은 북한과의 무역, 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촉진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당지도자들이 연속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일본외무성은 일본사회당을 대북한 접촉창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본사회당 간부 및 정치인들의 북한방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접촉 창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당은 일·중수교 과정에서와 같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로비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초 이래 일본사회당은 민간 차원에서 어업협정을 협상하였고 일·중무역협정에 기초한 무역각서를 북한과 체결하였다.

또 다른 일·북한간 주요 접촉 창구로는 1971년 자민당과 일본사회당에 의해 설립되었던 일·북한 우호촉진의원연맹이 있었다. 설립 당시 同연맹은 남한과의 우호연맹보다 규모가 적고 약했으며 일·북한 의원연맹의 회장이었던 자민당의 쿠노 유지(久

野忠治)가 1983년 하원에서 의석을 잃게 되자 이 연맹의 활동은 후임 인물 부재로 거의 중지될 만큼 집권자민당 내에서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인사는 적었다. 1990년이 되어서야 고위 자민당 정치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사회당이 1989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하고 1990년 2월 중의원선거에서 당세확장에 성공하자 자민당은 일본사회당과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북한 접근에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특히 전 각료였던 이시이 하지메(石井一)와 일본자민당 최대 파벌이었던 다케시다파의 총수겸 전자민당부총재였던 가네마루 신(金丸信)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으며 이시이 하지메 의원은 1991년 2월 일·북한 의원연맹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결국 일본의 정당들이 대북한 관계개선 이니셔티브를 취한 이면에는 일본의 정치권 내부 요인, 특히 일본의 독자적인 대한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집권 자민당내의 대한반도 인식과 진보계 정당 및 지식인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여론 그리고 사회당과의 타협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가네마루 전 부총재의 정치적 고려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가이후 수상의 계산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가네마루 전 부총재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수용하여 대북한 수교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대북한 관계정상화 추구

에는 일본의 대한반도 발언권 및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냉전붕괴후 국제정세 변화 및 한국의 북방정책, 북한의 대일접근 그리고 일본 자민당의 국내정치적 고려 등이 작용하고 있었다.

나. 현황

(1) 협상진행 상황

가네마루 전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사회당 공동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양국간 관계정상화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일본 후지산마루 선원을 석방하기로 약속하는 등 국교수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일본측 대표들은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북한측 조치 및 제의에 부응하여 일본인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해제, 양국간 위성통신 개방 등을 북한측에 약속하였다. 또한 일본측은 식민지배기간 동안 북한에 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양국간 정상화 이전에 완료할 것과 2차대전 이후 45년간 북한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선은 하나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승인한다고 약속하였다.⁶¹⁾

이러한 일·북한 양측의 합의에 대하여 한국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미국도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인 거부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들어 일본측의 태도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

61) *Korea Herald*, September 29, 1990, p. 1.

였다.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을 통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일본의 이중협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일·북한 정상화가 남북한의 대화진전 및 통일과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1990년 10월초 자신의 방북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네마루를 통해서 일본이 대북수교협상에서 5개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인 외교채널과 1991년 1월 노·가이후 회담을 통해서도 이 원칙들을 재강조하였다.

일본외무성은 북한과의 공식적인 협상관할권을 정당으로부터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바, 국내정치적 이유로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자 일본의 무성은 정당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외무성 본연의 신중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시켰다. 즉 일본외무성은 정치권의 대북한 접근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초기에는 환영 혹은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수교협상을 진행하면서 회담속도를 조절하는 등 대북한 관계개선 노력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다.

일·북한양측은 1991년 1월 30~31일에 제1차 일·북한수교회담을 개최한 이래 8차에 걸쳐서 수교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제8차 수교교섭(1992. 11. 5~6)에서 일본측이 이은혜와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하여 협상을 신중히 진행시키려는 뜻을 보이자 북한은 다음 협상 일자도 정하지 않고 수교회담을 종결지

었다.

(2) 의제별 협상 현황과 문제점

일본과 북한은 1990년 11월 북경의 예비회담에서 수교협상시 논의될 4가지 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합의된 협상의제는 ① 기본문제 ② 경제적 문제 ③ 핵문제와 남북대화 등 국제문제 ④ 쌍방에 관계되는 기타문제였다. 각 의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문제

일·북한 수교교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차이이다. 북한측이 제1차 교섭(1991. 1. 30)에서 제기한 것은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면서 무효라는 것이다.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하여 일본이 그 후 조선에 대하여 강요한 모든 조약이나 협정이 불법적인 것이고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과거의 한 시기 일본과 북한사이에 불행한 관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과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 “한·일병합조약을 포함한 과거 제조약은 현재는 무효이지만 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입장(제2차 회담, 1991. 3. 11)을 표명하고 있다.

일·북한교섭의 기본문제 중 국가승인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일부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1991년 9월 10일 「국가승인」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후 수일후에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사찰협정이 조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승인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⁶²⁾ 일본정부는 핵문제와 국가승인을 연계시켜 국가승인 문제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권관할권문제와 관련, 북한은 “조선은 하나”라는 입장에서부터 분단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은 남북이 두개의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분단이라는 현상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당한 기술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은 제 4차 회담(1991. 8. 30~9. 2)에서 북한의 관할권을 휴전선 이북으로 할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경제적 보상문제

북한은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식

62) 일본국내 좌파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시작한 것만 가지고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유엔총회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북한의 유엔가입이 인정되었고 일본도 이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명시적인 승인을 행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승인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미·북한관계도 1988년 12월부터 북경에서 18회에 걸쳐 정무참사관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1992년 1월 22일에 뉴욕에서 김용순과 미국무부 캔터 차관이 「핵문제와 기타현안사항」에 대하여 회담을 개최한 것은 사실상의 국가승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山本剛士, “日朝國交正常化交渉の焦點” 『世界』, 臨時増刊, 1992년 4월, p. 85.

민지시대 일·북한관계가 국제법상 교전관계였다는 인식으로부터 전승국으로서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전후 40년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기하였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외교부 부부장 전인철이 전후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일본의 가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조선의 분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둘째, 한국전쟁시기에 일본은 미침략군의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한국전쟁시기에 일본군은 해상작전 등에 참가하였다. 넷째, 일본은 한국전쟁후 전쟁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적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인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법률에 의해 행해진 일은 합법이며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측은 국제법상 일본과 북한은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제2차 수교교섭)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배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후보상과 관련, 일본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협력은 “유엔결의에 따라 각국의 행동에 협력한 것”(제2차 교섭)이며 전후 45년간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어서”라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제1차 수교교섭 기초발언).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한·일간에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경제문제는 재산청구권문제로서 취급되었다.⁶³⁾ 따라서 일·북한수교교섭에서도 재산청구권으로서 취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경우 “피해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본은 재산청구권교섭을 거부하였다(제4차 수교교섭). 이와 관련 일본측은 일본이 가한 손해가 어떠한 자료에 기초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유로 사망 혹은 부상당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증거서류 제출 등 객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법적 입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미 제1차 회담에서 사상범, 징용, 징병, 정신대의 규모나 약탈된 금, 은, 철광석, 쌀, 목재의 수량을 제시한 바 있는 북한은 일본측이야말로 필요한 법적인 증거를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제5차 및 6차회담).

일·북한 양측은 식민지 지배의 인식과 이를 기초로 한 청구권 혹은 보상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일·북한간의 문제로 보는 것

63) 한·일기본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한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b)에서 미국정부 또는 그 지지세력이 점거한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청구권은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논리에는 일본도 또한 북한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숨겨져 있다. 일본 측은 제6차 교섭에서 수교시에 체결하는 합의문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명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식민지 지배가 당초 불법이므로 당연히 그 위에 구축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Ibid.

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고 있는 한국국민의 심리적 반일감정도 의식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북한이 원칙에 고집하면 할수록 일본외교의 역사인식 결함 및 도의감각 결여가 부각되어 한국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측면을 일본과 북한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은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에서 그 불법성을 입증할 자료가 일본국내에서 표면화되면 시정할 것이며 북한측이 증거를 제출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하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이 증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규모는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은 가능한한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할 것이나 대일 경제원조 획득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국 정치적으로 보상문제를 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국제문제

1) 남북한 관계개선문제

제3의제인 국제적 문제는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핵사찰을 북한이 수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일본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며, 일본은 당사국은 아니지만 주변국으로서 지역전체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한간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일·북한 수교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일·북한 수교교섭을 진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즉 일본은 남북한대화가 중단되더라도 일·북한수교교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1991년 1월 남북한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북한수교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중수교로 일본은 일·북한수교교섭을 더욱 자국의 이익의 견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일본내에는 남북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북한교섭도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거의 대두되지 않고 있다.

2) 핵문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는 핵개발의혹이 있는 국가와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는한 일·북한수교교섭은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제1차 수교회담).⁶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한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은 핵개발능력도 없고 그 의사도 없다는 것이며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미군 핵과 동시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제1차 및 제2차 수교회담).⁶⁵⁾ 또한 북한측은 북한의 핵문제가 미·북한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제1차 수교회담) 일·북한수교교섭에서 보다는 미·북한 관계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64) 「朝日新聞」, 1991. 2. 2.

65) 「朝日新聞」, 1991. 2. 2; 「朝日新聞」, 1991. 3. 13.

즉, 북한은 1991년 7월 30일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제안한 이래, 9월 27일의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철폐 선언」,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선언」 및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내 핵부재선언」, 12월 31일의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한반도내의 미국핵무기에 대한 철수 사실 시인을 확인한 후에야 1992년 1월 30일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조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8월 미·일 양국 정부간 협의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조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다시금 강도를 높여 북한에게 핵재처리시설의 폐기시키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와타나베 일본의무장관은 1991년 11월 14일 “핵재처리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어렵다”고 언급하여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으며,⁶⁶⁾ 제5차 수교교섭(1991. 11. 18~20)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측은 연료재처리시설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⁶⁷⁾ 일본정부는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와타나베 외상의 외교연설(1992. 1. 24)에서 재처리시설의 철거를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제7차 수교교섭(1992. 5. 13~5. 15)에서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촉구하였다.⁶⁸⁾

66) 「朝日新聞」, 1991. 11. 15.

67) 「朝日新聞」, 1991. 11. 20.

68) 핵재처리시설과 관련, 핵확산금지조약은 그 건설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

일본이 일·북한수교교섭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미국에 의하여 일본에 전달되어 점차로 북한의 핵문제가 자국의 안보이익에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측은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일·북한 수교교섭을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조기수교 방침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친 수교교섭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⁶⁹⁾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찰이행에 의해서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⁷⁰⁾ 최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는 등(1993. 6. 12) 핵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

니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도 도카이에 재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내에서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여도 일본정부가 그 철거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대북한 핵재처리시설 철거요구를 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山本剛士, “日朝國交正常化交流の無點” p. 82; 「朝日新聞」, 1992. 5. 13.

69) 교섭개시전부터 수석대표로 임명된 나카히라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섭 타결에 필요한 시간을 대체로 2년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讀賣新聞」, 1990. 12. 17.

70) 이와 같은 일본의 확고한 입장은 제3차 수교교섭(1991. 5. 20~22)에서 북한이 선국교수립 후보상의 양보를 하였을 때 일본측이 이를 거부하고 핵사찰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여 타분야에 대한 협의 진행을 억제하였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朝日新聞」, 1991. 5. 22.

히려 일본에게 사전 통고없이 「노동1호」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을 무시 혹은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자 일본은 무토가분(武藤嘉文) 외무장관의 방한(1993. 6. 29)을 통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하려 하였으며,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철회와 IAEA핵사찰 협정 및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의무이행 준수를 촉구하는 등 대북한 강경 입장을 견지하였다(1993. 7. 8). 또한 무토가분 일본외무장관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한간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하여 “북한이 NPT탈퇴를 완전히 철회하고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것인지가 불분명해 크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⁷¹⁾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8차 회담(1992. 11)을 끝으로 재개되지 않고 있는 일·북한수교회담은 북한핵 의혹에 대한 해결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한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사 재개되더라도 가시적인 회담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북한간 제네바 고위급 회담 후 북·IAEA간의 협상진전 및 북한의 사찰수용 여부 그리고 남북한간의 상호사찰 협상 진전 여부를 지켜보면서 회담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71) 「讀賣新聞」, 1993. 7. 21.

(라) 기타문제

제4의제는 기타문제인데 이중 이은혜문제는 일본경찰청의 조사 결과 그녀가 북한에 있을지 모른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측이 북한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측은 이 문제가 남한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수교교섭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에서 일본의 교섭태도를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금후에도 일본국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반발하는 이은혜문제를 일·북한수교교섭에서 제기하여 교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제3차 및 8차회담에서 일본측이 재차 이은혜문제를 제기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⁷²⁾

또 하나의 기타문제는 재일 조선인의 법적 지위향상 문제와 함께 거론된 일본인 처문제이다. 현재 일·북한 수교회담에서 일본측은 수교이전이라도 일본인처의 모국방문을 허용하여 줄 것을 북한에 요청하였으나 북한측은 제2차 회담(1991. 3. 11~13)에서 회담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수교이전이라도 일본인 처의 일본왕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히면서 일본인 처문제

72) 이은혜문제가 제3차 수교교섭이 있기 5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수교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권의 의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東京新聞』 1991. 12. 30.

와 수교회담 진전을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⁷³⁾ 일본은 재일 조선인의 일·북한간 왕래가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일본인처 왕래를 수교 이전에라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처들이 자유왕래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고향방문을 위한 좋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⁷⁴⁾

다. 일·북한수교 전망

핵문제는 일·북한수교의 필수적인 현안으로서 이 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북한수교 교섭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일·북한 수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식민지 보상에 있어서 청구권방식으로 할 것인가 혹은 배상형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역사해석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을사조약과 합병조약 등 구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항일투쟁 등을 들어 보상과 함께 전쟁의 전승국으로서의 배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무한정 명분만을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북한이 전쟁당사국 지위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73) 「朝日新聞」, 1991. 3. 13.

74) 「世界週報」, 1992. 6. 2.

또한 일본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회담속도를 조절하여야 하고 일본 내에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므로 너무 수교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⁷⁵⁾ 일·북한 수교교섭은 급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본이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감안해 볼 때 일·북한수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8차 회담을 결렬시킨 이은혜문제도 일본내 공안당국과 언론의 동향여부 그리고 일본정부의 회담지연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는 큰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

75) 佐藤勝巳, “日朝交渉の決裂を祝す,” 「諸君」(1993年 1月), pp. 175~81.

第Ⅳ章 일·북한수교와 한국의 대응

1. 일·북한수교가 한반도 통일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 교차승인 및 남북한평화체제 구축

일·북한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미·북한관계 정상화도 촉진되어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교차승인은 북한이 「대남 사회주의 혁명전략」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국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북한도 남북한교차승인을 계기로 남북한 분단상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남북한간 냉전적 대치관계를 남북한 평화공존관계 혹은 화해관계로 전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일·북한수교로 촉진될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간 정치적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이고, 남북한의 본격적인 협상체제 진입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대남평화공존정책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들의 보장역할이 기대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군비통제방안」(정치적 신뢰구축 -> 군사적신뢰구축 -> 군축)을 실현함에 있어서 남북한 양측의 자주적인 노력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중개, 감시 그리고 보장에 대하여는 주변국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교차승인은 주변4강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고 러시아가 국내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문제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자신의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 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에 한국전쟁이후의 군사적 대치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남북한사이에는 140만이 넘는 병력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총격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역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⁷⁶⁾ 또한 일본은 북한의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우려

76) 防衛廳 編, 「防衛白書」(平成 4年版), p. 72.

를 나타내고 있다.⁷⁷⁾

따라서 일본은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및 군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를 남북한이 주도하더라도 그 실천에 대해서는 국제적 검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⁷⁸⁾ 이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의 신뢰구축 및 군축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2+4」 등 다자간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2+4」 등 다자간 접근이 시도될 경우 이를 통해서 남북한간 신뢰구축 조치들과 아울러 총병력 감축 및 생화학병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의 군축 조치들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일·북한 수교로 북한측에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증대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 토의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보장국의 일원으로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에 대한 국제적 보장에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북한 양측의 군사력 및 군사배치 이동에 대한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엄격한 감시·통제 등 검증기술면에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⁷⁹⁾ 물론 남북한의 일

77) 防衛廳 編, 「防衛白書」(平成 4年版), p. 74.

78) Yi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p. 112~15.

79) Reinhard Driete, *Japan's Ris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The Case of Arms Control* (London: The Athlone Press, 1990), p. 81.

본에 대한 감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인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는 미국과 중·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재정긴축을 이유로 검증 등에 관한 일본의 경제·기술적 공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측은 비무장지대의 엄정한 감시를 위해서 미·일·중·러가 합동 혹은 중·러·북한과 미·일·한국의 사찰단이 사찰하는 체제를 고려하고 있다.⁸⁰⁾ 또한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감시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위임할 경우 한국이 반대하지 않는한 유엔평화유지활동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사위대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 남북경협

일·북한 수교후 북한과 일본사이의 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

80)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비무장지대 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일본의 국가기술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를 남북한 및 보장국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정찰위성을 보유할 경우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완충지대의 감시(monitoring)를 위한 센서 등의 개발 내지 운영을 통한 기여이다. 일본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비무장지대 감시를 위한 유효한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현장 입회 사찰이나 공중사찰에 있어서 사찰을 위한 장비의 제공과 사찰비용의 일부 부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특수한 민족감정을 고려하여 인적 지원은 미국에 위임하고 일본은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미·일간 역할분담을 고려하고 있다.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集』 第19卷 3號 (1991年 12月), pp. 61~62, 66.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게 제공할 배상자금은 현재 북한을 체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물론 북한경제 침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노선과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정치·군사 우위의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한 배상 및 경제교류로 단기간내에 북한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공여되는 배상자금은 북한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생필품 및 식량부족과 에너지, 수송분야 등 사회간접 자본의 만성적 애로현상을 단기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북한 수교에 의한 경제교류 증대가 남북한 경협에 주는 영향은 북한경제 재건의 성공 여부 및 일·북한경제교류 증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번째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의 배상금 및 경협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북한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일·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를 증대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은 개방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개방을 가속화하여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경제의 대일의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경제교류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일간 양국은 북한 시장을 둘러싸고 심각한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일본 등 서방선진국

가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즉 재료별 제조제품과 기계 및 운수 장비 중 대부분을 한국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간에 상호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통일을 대비한 경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는 이에 따른 인적왕래 및 정보교환 증대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통일비용을 절감하면서 통일과정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체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가상 시나리오는 북한 경제가 일본의 경제지원으로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남한과의 경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이는 북한이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과의 경협보다는 체제안정과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일본과의 개방 및 경협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조건으로 일본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일·북한 경제교류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범위를 크게 제약할 것이고 남북한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로 가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북한수교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인해 북한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일·북한간 경제교류도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은 일본의 경제진출을 자극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대남한 관계개선과 부분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반적인 대남정책 전환을 단행하지 않는 한 남북한 경협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네번째 시나리오는 일·북한경제 교류를 통한 경제회복 노력이 실패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어 북한이 남한에 대한 경제협력 필요성을 제기시키기보다는 한국에 대해 더욱 피해망상적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평화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일·북한수교가 남북한 경협에 미칠 효과를 전망하면, 두번째 시나리오가 주가되고 첫번째 시나리오가 보완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은 일·북한수교 후 첫번째 시나리오처럼 대일 경제협력을 증대하고 이와 병행하여 남한과의 부분적인 경협도 병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나 두번째 시나리오처럼 체제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남한과의 경협보다 체제안정과 선진기술 및 자본을 제공해 줄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경협은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라. 북한의 개혁·개방

일·북한수교는 북한의 개방을 부분적으로나마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일본을 비롯한 서방제국의 자본유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자본의 대북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부분적인 개방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외국인 투자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한(과실송금 허용, 외국인 100% 출자 허용 등) 외국인 투자 관련법(조선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발표하였으며(1992. 10), 일본,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 관련 투자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⁸¹⁾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북한 수교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보상금이 북한에 유입되어 북한이 부분적인 대외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 재건을 시도할 경우 북한의 대외개방을 위한 조치들이 파급·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IBRD), 아·태협력회의(APEC), 태평양협력회의(PECC) 등 아·태 및 세계적인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동북아 6개국이 참가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도 가능해져 북한의 개방도 촉진될 가능성이

81) 「중앙일보」, 1993. 6. 19.

높다.

그러나 북한은 지나친 대외개방이 체제붕괴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북한은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기업법 21조는 북한의 「직업동맹」이 종업원활동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전히 대외개방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⁸²⁾ 따라서, 일·북한수교는 초기 단계에서 대외개방 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일 것이나 체제개혁 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대응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 의하여 일·북한간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한 경제교류가 증진된다면 이는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력 증대와 이에 따른 한국의 통일비용 감소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북한수교는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일·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확대 및 상호 보완성 증대보다는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간 및 한·일

82) 「내외통신」, 종합판, 46호(1992. 7. 1.~12. 31), pp. 235~38.

간의 경쟁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일·북한수교가 남북한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정치·경제 상황에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남북한 양국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전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남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일본의 예속하에 두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북한수교후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일본을 비롯한 주변4강은 순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의 통일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거나 4강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 경제의 활성화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부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여유가 군사력을 강화시킬 경우 남북한의 긴장관계는 고조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일본의 경제지원에 의하여 북한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대북경제교류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일·북한 수교가 한반도통일 문제에 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저지하고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통일에 필요한 건전한 정치·경제·안보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우선 전반적인 대일관계를 새로운 전향적인 발상을 가지고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과거처럼 일본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과거사에 집착한다든지 일본의 독자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존하는 등의 감정적이며 小國的인 외교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 이유는 일본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안보적 역할증대는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 및 일본의 국내적인 신보수화에 따른 거역할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나친 반일적 민족주의와 대일경계론은 자칫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여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일본을 한반도통일의 반대세력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및 인정을 통하여 일본을 한반도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 협력 세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자국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인정받기 위한 최초의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사를 조기에 청산하려 하고 있고 7월 18일 총선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은 일본과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조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하여 한국은 일·북한수교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경로를 통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협력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추진하려 하고 있는 일·북한 수교 후의 일·북한 경제협력에 대하여도 과민한 경계보다는 일·북한의 경제협력을 이용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및 한국의 정치·경제적 실리확보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일본국내정치 변화에 따른 미·일동맹 변화 가능성 및 한·일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일·북한수교후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오판 등 안보상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한·미 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등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를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이행기에 북한 김일성체제의 붕괴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한반도통일 과정 및 통일후의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당분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과도 주한미군 잔류에 대한 합의유도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데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정치대국 일본의 영향력에 압도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

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한반도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러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일·중·러 3국간의 일정한 견제와 균형유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한국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지나치게 국제적 경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민족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하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독자적인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역할증대를 다자간 협의체의 틀 속에서 주변국들의 양해와 협조하에서 모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전지역적인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한반도의 직접 이해 당사국인 남북한 및 동북아 4강간에 소지역적인 접근을 통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은 한반도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국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설득하여야 하고, 한반도통일로 야기될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통일한국에 대하여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일본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주변국의 우려사항인 북한

의 핵의혹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한반도의 통일과정도 국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북한의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핵주권론 등도 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핵의혹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협상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핵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핵주권론은 아무리 평화적인 핵이용을 강조하더라도 주변국들의 경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적인 차원에서 조용하고 지속적인 기술축적 노력을 통해 대처해야 할 문제로서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과열되게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품교역에서 합작 투자와 같은 경제협력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두나라 경제의 보완성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단계적·부분적이 아니라 일시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상품교류부문보다 북한의 인력자원과 부존자원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형태의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는 북한과 일본의 경제합작에 의하여 한국의 수출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증대될 수 있는 일본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활성화는 경제 면에서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분위기를 조성해 주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김옥렬. 「한국과 미·일관계」. 서울: 일조각, 1973.
- 전동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경제와 무역전망, 1991년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2.
- 佐佐木春隆. 「韓國獨立運動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85.
- 佐藤勝巳. 「崩壊する北朝鮮」. 東京: ネスコ/ 文藝春秋, 1991.
- 豊田利幸 編著. 「太平洋非核化構想」. 東京: 岩波新書, 1990.
-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第24號, 昭和 56年版.
- 防衛廳 編. 「防衛白書」. 平成4年版, 1992.
- Drifte, Reinhard. *Japan's Ris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The Case of Arms Control*. London: The Athlone Press, 1990.

2. 논 문

- 김광욱. “일본정부의 대북한 국교교섭에서의 진보층의 압력에 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권 3호, 1991년 가을.
- 김동훈. “일·북한관계의 변화전망과 통일문제.” 「안보연구」. 제22호, 1992.
- 오정근. “일본자본의 한국진출 현황과 전망.” 「일본평론」. 제4

집, 1991 가을/겨울호.

佐藤勝巳. “日朝交渉の決裂を祝す.” 「諸君」, 1993年 1月.

———. “金正日の「悪魔の選擇」.” 「文藝春秋」, 第71卷, 第5號.
1993. 5.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プ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關谷道春. “間接防衛論.” 「國防」, 第42卷 第4號, 1993年 4月.

田中晴政. “核擴散: イメージト現實の乖離.”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仲衛. “改憲論議と對外關係.” 「國防」, 第42卷 第4號, 1993年 4月.

中平立. “日朝交渉の現場から.” 「外交フォーラム」, 1992年 2月.

西岡力. “「核」外交の成功に自信深めた北朝鮮.” 「世界週報」,
1993. 7. 6.

長谷川熙. “北朝鮮のミサイル實驗, 自衛隊は本當に知らなかつた
のか,” *AERA*, Vol. 6, No. 27, 1993. 6. 29.

桶口恒晴. “集團的自衛權と國連軍への參加をめぐる政府解釋の
變遷.” 「新防衛論集」, 第19卷 第2號, 1991年 8月.

松村五郎. “軍備管理の檢證と日本の役割.” 「新防衛論集」, 第19卷
3號, 1991年 12月.

森本敏. “九十年代末に緊迫する東北アジア.” 「世界週報」, 1992.
4. 28.

山本剛士. “日朝交流の現状と問題點.” 「提言: 日本の朝鮮政策」,
東京: 岩波書店, 1989.

———. “日朝國交正常化交渉の焦點.” 「世界」. 臨時増刊, 1992년 4월.

Kakizawa, Koji.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Komaki, Teruo. “North Korea Inches Toward Economic Liberalization.”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2, Summer 1992.

Mack, Andrew.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no. 83, Summer 1991.

Motoi, Tamak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4, Winter 1991.

Okita, Saburo. “Japan’s Role in Asia-Pacific Cooperation.” *The Annals*. vol. 513, January 1991.

Satoh, Yikio. “Reduction of Tension on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Youn, Jung-Suk.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 Summer 1992.

———.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3. 기 타

「内外通信」

「中央日報」

「讀賣新聞」

「東京新聞」

「朝日新聞」

「朝鮮時報」

「世界週報」

AERA

Herald Tribun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10대 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日本の 對北韓政策

研究報告書 93-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8월 일

發行日 1993년 8월 일
